

노외주차장 설치 관련 법률개정 건의안

의안 번호	12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

발 의 자 : 이효상

찬 성 자 : 천병태의원 외 9인

1. 주문

-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 조성 계획은 「도시정비촉진법」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부지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음.
-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 시 지정된 노외주차장 부지는 그 고유목적인 인근 주민 내지 방문객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용지로 조성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개인의 상가 등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되어 그 고유목적 달성을 하지 못함.

2. 제안 이유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(공공시설)에 보면 공공시설의 범주에 “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”이 있는데 이 문구를 “대규모(300,000㎡이상)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차장”으로 개정하여 공기업 등이 조성한 노외주차장 용지도 공공시설에 포함하여 무상귀속되도록 법 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 경감하고
-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①항 노외주차장용지에 30%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노외주차장을 원래 취지대로 일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용주차장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3. 기타

가. 건의문 : 붙임

나. 건의문 보낼곳(2개소)

- 대한민국 국회(국회의장)
150-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(여의도동)
- 국토교통부(장관)
301-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노외주차장 설치 관련 법률개정 건의안

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 조성 계획은 「도시정비촉진법」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부지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신규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 시 주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

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법률개정을 건의합니다.

첫째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공공시설)에 보면 공공시설의 범주에 “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”이 있는데 이 문구를 “대규모(300,000㎡이상)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차장”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.

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에 따른 주차장 용지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(국토교통부 훈령 제565호)에 따르면 택지개발 시행사에서 이 용지를 지자체에 조성원가로 수의계약토록 되어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으로 볼 때 이 용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법은 있으나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

둘째,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①항 노외주차장용지에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

조항을 삭제하여 노외주차장은 원래 취지대로 일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용주차장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.

이유는 택지개발 등으로 그 범주 내 갖추어야 할 노외주차장 비율대로 주차장 부지를 지정해 놓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자체가 수의계약 못 할 시 다음단계로 시행사에서 일반에게 공개 입찰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주차장 용지라도 근린생활시설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일반에게 공개 입찰될 경우 주차장 용지로서의 원 취지에 맞지 않아 택지조성이 완료되었을 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에 시달릴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.

위와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공공시설)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①항의 법률 개정을 건의하오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9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

신구조문대비표(국토계획법 시행령)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공공시설) 법 제2조제1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. 항만·공항·운하·광장·녹지·공공용지·공동구·하천·유수지·방화설비·방공설비·방수설비·사방설비·방조설비·하수도·구거</p> <p>2.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·운동장·저수지·화장장·공동묘지·봉안시설</p>	<p>제4조(공공시설) 현행과 같음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“대규모(300,000㎡이상)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차장”·운동장·저수지·화장장·공동묘지·봉안시설</p>

신구조문대비표(주차장법 시행령)

현행	개정안
<p>제1조의2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)①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”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. 다만,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창고시설,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.</p>	<p>제1조의2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)①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”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.</p> <p>“다만 이하 삭제”</p>